
서울시는 광화문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라!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지키기
제 단체, 지역 성명

- * 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서울시는 세월호 지우기 행태를 중단하라(7/22)
- *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월호 기억공간'은 우리모두의 기억입니다. (7/21)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 계획 중단하고, 존치 방안을 수립하라! (7/20)
- * 중랑세기행,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지우기를 멈추라. (7/20)
- *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계획 철회하라세월호 기억과 진실을 훼손하지 말라(7/20)
- * [세월호참사 단원고 생존 학생] 세월호 참사 단원고등학교 생존학생은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반대합니다!(7/20)
-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세월호 기억공간은 가족과 시민 모두의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세월호 지우기를 중단하라! (7/19)
- *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7/19)
- * 용산416연대, 광화문 기억공간 철거 관련 용산 4.16연대 입장 (7/16)
- *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바라며 광화문광장 세월호기억공간 철거를 반대하는 서울시민단체-55개단체,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뜻에 반하는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라! (7/16)
- * 기억과 성찰의 도보순례 팽목바람길, 성찰의 숙의와 사회적 숙성을 불편해하는 위정자들. 우리는 여전히 참사의 한 가운데 서 있다. (7/16)
- *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용납할 수 없는 고양시민들, 기억을 철거할 수 없다! (7/15)

- * 촛불혁명안성채불연대, '세월호 기억공간'은 광화문 광장에 존치 되어야 한다. (7/15)
- * 대구4.16연대, 그 누구에게도 이 영혼의 영토를 철거할 권한은 없다 (7/15)
- * 광주시민상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은 광화문 세월호기억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7/15)
- * 주권자전국회의,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세월호 기억관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 (7/14)
-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7/14)
- * 참여연대,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7/13)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7/13)
- * 진보대학생넷,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통보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7/12)
- * 전국대학민주동맹협의회, 전국대학민주동맹협의회는 서울시의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요구를 규탄한다.(7/12)
- * 전국여성연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계획 오세훈시장을 규탄한다! (7/12)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하려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7/12)
- *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용납할 수 없는 전세계 시민 동포들, 공동성명 추진 중, “기억을 금지하지 말라!” (7/12)
- * 민주노총 성명,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요구를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제 단체들과 함께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7/12)

[성명서-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서울시는 세월호 지우기 행태를 중단하라

서울시는 세월호 지우기 행태를 중단하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조서 공사를 이유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통보했다.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이 세월호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며 생명과 안전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공간이다. 또한 촛불시민들의 추모의 마음과 진실에 대한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러한 세월호 기억공간을 없앤다는 것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을 묻어두고 외면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의 아픔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참사 후 어느덧 여덟 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 세월호참가의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진실을 묻어두고 외면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생명과 안전의 가치는 경시될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표지석이나 식수가 아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와 서울시장의 면담 거부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한다. 지금 당장 세월호 기억공간 폐지 방침을 철회하고, 공사 기간 임시 이전 및 완공 후 세월호 기억공간 위치에 관해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면담에 응하라. 그렇지 않다면 현재 서울시의 행태는 세월호 지우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1년 7월 22일

행동하는 지역공동체 동서울시민의힘

[연대 성명]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세월호 기억공간’은 우리 모두의 기억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기억합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안전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벌어진 아픔을 기억합니다.

팽목항에서 사람 목숨이 달린 상황에도 준비되지 못한 행정이 낳은 참담함을 기억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과 함께하는 슬픔마저 이념으로 편취하던 모진 얼굴도 기억합니다.

세월호는 우리 모두의 기억입니다.

세월호로 드러난 아프고, 참담하고, 모질었던 우리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하자는 우리의 반성입니다.

세월호로 건져진 타협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가치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안전에 대한 우리의 다짐입니다.

세월호로 함께한 광화문 자리는 어둠에서도 빛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미래이며 우리의 희망입니다.

반성이며 다짐이고 희망인 세월호 기억은 이 시간을 함께 사는 우리 모두에게 새겨진 시대의 기억입니다.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이 시대의 기억을 지켜주십시오.

생명이 이익보다 먼저이고 안전이 효율보다 우선임을 ‘세월호 기억공간’을 통해 새기도록 하여 주십시오.

고통과 아픔을 치워버리고 덮어버리는 과거 행정의 옹졸함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올바른 기억을 보존하는 발전된 행정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할 세상이 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향할 수 있도록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켜주십시오.

미래의 희망은 과거의 아픔을 통해 더 질긴 뿌리를 가집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뿌리를 뽑아버리는 과거의 모자란 행동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 계획 중단하고, 존치 방안을 수립하라!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 계획 중단하고,

존치 방안을 수립하라!

서울시가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을 7월 26일 이후 강제 철거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서울시는 명목상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핑계를 대면서도, 본래 기억공간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세월호 지우기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는 과거를 알지 못한 채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일상의 공간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가 주는 뼈아픈 교훈을 늘 되새겨야 한다. 세월호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보다 이윤을 중요시하는 야만적인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진실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고 책임자 처벌도 미미하다. 공적 조사위원회가 세 차례 꾸려졌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했고, 특검수사 역시 진행 중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행동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 잘못되었고 향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은 일상의 공간인 광화문광장에 존치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가 주는 뼈아픈 교훈과 늘 마주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잊게 되면 우리 계속해서 안전보다 효율과 이윤을 중요시하는 야만적인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월호 7주기를 맞아 입장문을 발표하며 “(세월호 참사를)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업그레이드해가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 통보는 이러한 입장과 배치된다. 일상의 공간에서 세월호참사를 떠올릴 공간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7년 전 그날, 축축한 바다 앞에서 국가의 실종을 목도했다.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304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7년이 지난 오늘,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일방적으로 지우려고 한다. 유가족, 시민들과의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월호 7주기 입장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를) 끊임없이 돌이켜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억공간을 일상의 공간인 광화문광장에 존치해야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중랑세기행]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지우기를 멈추라.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 지우기를 멈추라

지난 7월 5일, 서울시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광화문 세월호 기억 공간 철거를 통보했다. 광화문 광장 공사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것은 기억공간 존치를 바라는 수 많은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며 악의적인 세월호 지우기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광화문 기억 공간은 세월호 참사와 진상규명에 대한 기억과 약속을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의지와 동참이 축적돼 왔던 공간이다. 수 많은 시민의 발길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서울시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기억공간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민으로서, 기억 공간에 담긴 세월호 비극의 과거와 현재, 더 안전한 세상의 염원을 담은 미래까지 말살하려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오시장은 반 인륜적이고 몰 역사적인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오세훈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도의와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의 입장에 동의하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그대로 두라
2. 서울시는 철거통보를 철회하라
3. 시장은 세월호 가족들 및 시민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들으라
4. 공무원들은 역사 앞에서 양심에 따라 움직이라.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뜻을 같이하는 서울 시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나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 15일

광화문 기억공간 철거에 분노하는 중랑 세기행(중랑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동

[연대 성명]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계획 철회하라
세월호 기억과 진실을 훼손하지 말라

“주님께서서는 정의를 실천하시고, 억눌린 이들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신다”(시편 103,6)

세월호 참사후 7년, 세월호 진실규명과 생명 존중 사회를 애타게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지난 7월 5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통보는 과거 억압과 폭력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공권력의 잔상을 떠 올릴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리라 기대했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들의 온갖 공격과 비난에 시달리며 상처 입고 모욕당했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통보는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의 파렴치한 행동의 연장이자 세월호의 아픔을 애도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동으로 해석될수 밖에 없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위로의 공간입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현재, 기억공간의 철거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한 번 더 죽이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고통받고 아픔을 겪은 이웃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아픔을 반복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천주교 신앙인은 이웃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자 세월호 기억공간이 지켜져야 한다고 외칩니다.

이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계획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세월호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세월호 기록관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국민의 기억집합체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철거 통보를 철회하라

2021년 7월 19일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세월호참사 단원고 생존 학생 성명서] 세월호 참사 단원고등학교 생존학생은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반대합니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등학교 생존학생은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반대합니다!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피켓시위와 단식농성, 노란리본 제작 등참사 직후부터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준 시민들이 불철주야 함께하며 만들고 지켜온 공간입니다.

그곳이 있었기에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그리고 저희의 친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많은분들이 계셨고,그 분들 덕분에 생존자인 저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공간을 통해 생명과 안전, 진실이 우리 사회에 있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실과 정의를 밝히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다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광화문 기억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저희 뿐만 아니라 국가와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큰 아픔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월호 기억공간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희에게는 그 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희 친구들의 죽음이 허망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에 대한 선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20일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 학생 38명

김00,최00,김00,한00,고00,안00,박00,박00,김00,전00,박00,양00,이00,전00,최00,전00,나00,유00,설00,이00,장00,김00,김00,임00,김00,김00,김00,류00,손00,정00,정00,정00,김00,김00,김00,박00,이00,이00

[연대성명-인의협] 세월호 기억공간은 가족과 시민 모두의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세월호 지우기를 중단하라!

세월호 기억공간은 가족과 시민 모두의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세월호 지우기를 중단하라!

서울시는 지난 5일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26일 철거할 것이라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 통보했다. 오세훈 시장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안한 면담도 거부하고 기어코 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안산 화랑유원지에 조성예정인 추모시설이 있기 때문에 광화문광장에 기억공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오세훈이 속한 국민의힘 강광주 시의원이 삭발까지 하며 저지하려 했던 안산 추모시설을 핑계로 대는 것은 염치도 없는 일이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는 서울시가 세월호를 서울 시민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는 무능한 정치와 선박 규제완화 등 생명·안전에 대한 경시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남은 이들의 일상을 비극으로 이끄는지 일깨워주었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은 세월호가족과 시민들이 만든 역사가 담긴 공간이고,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가족들의 투쟁은 시민들이 지난 정권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올 수 있었던 큰 원동력으로 승화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월호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금의 과제를 잊지 않고 앞으로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다. 이러한 세월호 기억광장을 시민과 가족들의 의사에 반해 기어코 철거하는 것이 세월호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또한 진실을 감추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모든 시민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권리가 있다. ‘산 자’들이 요구한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세월호 기억관 철거를 중단하라! 의료인들도 서울시가 세월호 지우기를 추진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2021. 7. 19.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연대성명-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가 7월 2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철거하라고 통보했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유로 들어 일방적 통보를 한 것이다.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4.16단체들은 서울시에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가 끝난 후 세월호 기억공간을 보존할 대안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 철거 통보를 해 불통 행정을 드러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이 갖는 상징과 의미를 생각해 서울시에 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사 후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방안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곳이자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기억하고 행동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로 만들어졌다.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 생명과 안전이 무시되는 일상을 경험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밝히고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기억을 벌써 잊었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민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억공간이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고 기억공간을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2021년 7월 19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연대성명] 광화문 기억공간 철거 관련 용산 4.16 연대 입장

광화문 기억공간 철거 관련 용산 4.16 연대 입장

세월호 기억관은 참사 직후부터 광화문을 지킨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공간이다. 서울 한 복판에 세월호참사와 그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길을 건너며, 차를 타고 지나가며 그토록 아팠던 2014년 4월을 일상 속에서 떠올리고 희생자들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기억은 사회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모아 행동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 가운데 자리잡는다. 기억하겠다는 다짐이 실현되는 기억의 공간들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세월호 참사를 목격하고 그 비통함을 마음 한 켠에 간직하고 있는 시민들로서 서울시의 일방적 세월호 기억관 철거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억공간 철거는 잊지 않겠다는 수 많은 시민들의 다짐을 부정하는 것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 전과 다른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막아서는 처사나 다름없다.

용산 4.16 연대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한다. 미래세대에게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기억공간 영구존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 그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 후 함께 눈물 흘리고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들었던 마음으로 용산 4.16 연대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 16일

용산 4.16 연대

[연대성명]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뜻에 반하는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라!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뜻에 반하는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라!

서울시가 오는 7월 26일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대화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2014년 7월 14일 유가족들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면 단식농성을 시작했던 곳이다. 유가족이 40일간 처절한 단식농성을 벌였고, 이에 수천의 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했던 곳이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이 공간을 지켜냈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린 촛불시위의 불길을 지퍼 올린 현장이다. 이곳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확산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던 대한민국 역사의 공간이다.

우리는 유가족들과 함께 7년여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을 지키면서 피켓을 들었고, 노란리본을 만들어 시민들과 나누었다. 세월호참사가 이전의 다른 참사처럼 기억에서 지워지게 할 수는 없었기에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자며 이 자리를 지켜왔다. 따라서 이 기억공간은 유가족들과 서울시민들이 함께 가꾸고 만들어온 소중한 공간이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공사 기간 중이어서 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협조하는 마음으로 기억관의 문을 닫고 있을 뿐,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이곳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시는 기억관을 철거하기 전에 공사 종료 후에 기억관을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존치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유가족들과 협의했어야 했다. 그런 대화는 하지 않은 채 광화문 세월호 기억관을 치우려고만 하는 것은 유가족과 시민들이 만들어온 소중한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철거가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기억공간을 안전하고 운영이 가능한 장소로 이동하고, 공사 이후 광화문 광장을 찾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기억하고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찾는 것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7년간 세월호유가족들과 함께해온 서울시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아픔의 역사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월호기억공간 철거 통보를 철회하고 사과하라!

하나.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공사 기간 중에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하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공사 후 세월호참사 기억관의 운영방안을 제시하라!

하나.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세월호기억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년 7월 16일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바라며 광화문광장 세월호기억공간 철거를 반대하는 서울시민단체

4.16약속지킴이도봉모임, 강서라임방송국, 강서시민정치참여단, 강서식생활교육네트워크,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양천공동행동, 강서양천교육희망네트워크,
강서양천민중의집사람과공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모임
[다음], 강서여성포럼, 강서울림미디어, 강서옹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공간 짬,
꿈샘누리, 구로공동체라디오 구로FM, 구로노란리본공방, (사)누리마음연구소,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시서점, 도봉민주광장, 리멤버0416옥수거점, 마로니에촛불,
마을과아이들, 마을생활전파소, 마포세월공감, 모해교육협동조합, 방화마을방송국,
빵과그림책협동조합, 배고픈사자 작은도서관,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센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세월호를기억하는강서양천시민모임,
세월호를기억하는원불교인들의모임, 세월호를기억하는은평사람들의모임, (사)양천마을,
양천시민사회연대, 여성환경연대, 예음회예술단체, 원불교인권위원회, 은행정책마당,
(사)장애와사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서구지부, 중랑녹색당, 중랑에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모임, 중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중랑행복교육, 청년보라, (사)함께하는 나눔과이음, 하늬가람,
(사)한국장애인녹색재단 강서지회, 한살림서울중랑지구,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가나다순)

[연대성명] 성찰의 숙의와 사회적 숙성을 불편해하는 위정자들. 우리는 여전히 참사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서울시는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의 일방적 철거통고와 후속을 당장 철회하라!

세월호참사 이후, 7년.

우리 사회는 어디에 도달해 있을까?

우리의 기억은 초를 다투던 2014년 4월 16일 참사의 시각에 멈춰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이유로 오는 7월 26일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을 철거한다고 통고했다.

더불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의 시장 면담 요청 또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위정자들이 참사를 다루는 방식은 늘 이래왔다.

서둘러 갈무리 짓고 도서 관리하듯이 구획 지어진 책장들 속 어느 한 칸에 분류해서 정리 수납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일상과 분리시키고 과거의 한 페이지로 우리의 기억을 박제화시킨다.

광화문광장의 기억공간 ‘기억과 빛’은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니다.

참혹하게 생명을 앗아간 부조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공간이며, 기억의 대상으로서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이정표이다.

광장이라는 열린 시공간에 기억공간을 세운 이유이다.

조각조각 파편화된 일상의 시민들을 성찰이라는 관계 맺기 속으로 인도하는 공유공간인 곳이다.

사회적 기억과 성찰을 통한 사회적 감각 키우기를 극도로 불편해하는 위정자들의 거둬지는 구태는 2021년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 40년 전 광주항쟁도 그렇게 위정자들의 책장 속에 방치해 왔고, 이번 사태도 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사회적 숙의의 과정 없이 참사와 사회적 성찰을 대상화하려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도한 행태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에 촉구한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일방적 철거 통고와 후속을 철회하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참사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까지 절절했던 투쟁으로 세운 기억과 성찰의 광장, 촛불로 밝힌 약속과 연대의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다.

2021년 7월 14일
기억과 성찰의 도보순례 팽목바람길

[연대성명 -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용납할 수 없는 고양시민들] 기억을 철거할 수는 없다!

<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용납할 수 없는 고양시민 성명서 >

기억을 철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공사를 이유로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 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진행 중에 있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현재를 살며, 안전한 미래를 꿈꾸는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난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세월호 기억관 존치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참사를 눈앞에서 바라 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의 마음, 안전하고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는 마음들이 담긴 역사적인 공간이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교육의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진 지극히 소박한 기억공간조차 허용하지 않고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보는 416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려 한다면 그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넘어,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반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기억을 금지하는 행동이며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 지우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의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기대한다.

만약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해도 불구하고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는 것에 고양시민들은 분명한 입장으로 반대한다.

우리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을 그대로 두라.
2. 서울시는 철거통보를 철회하라.
3. 시장은 세월호 가족들 및 시민들을 만나 그 목소리를 들어라!

4. 공무원들은 역사 앞에서 양심에 따라 움직이라!

기억을 금지하지 말라!

2021년 7월 13일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용납할 수 없는 고양시민들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 시민 모임,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시민회,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YMCA, 고양YWCA, 나들목일산교회,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전교조 고양초등지회)

[연대성명 -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세월호 기억공간’은 광화문 광장에 존치 되어야 한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광화문 광장에 존치 되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고함

세월호 참사는 단순하고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당시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 규탄 집회와 수사 등으로 국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세월호’라는 선박의 구입시 투자와, 이후 관리는 국정원에서 했으며, 실 소유자 유병언 회사의 선박 안전 점검은 항상 합격을 받았다. 사고의 과정과 사고 후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의문과 의혹 투성이었다. 대다수 꽃다운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304명 희생자들의 유가족과 양심있는 시민들은 아직도 사건의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 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최고의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의 국가사회적 보장 시스템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촛불혁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진상규명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2016년 10월부터 본격화 된 촛불혁명은 수십년간 쌓여온 반인권, 반생명, 반민주, 위헌, 불법, 불의의 적폐 체제를 청산하고, 인권, 생명, 민주, 정의, 평등, 평화 지향 체제를 유지 발전 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 특히 박원순 시장의 역할은 지대 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의로운 수많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광화문에 세월호 광장을 마련해 주었고, 촛불혁명 시민들에게 역사적 역할의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2017년 촛불혁명 후 박시장의 서울시는, 세월호광장이기도 했던 광화문 광장의 한 칸에 기념비적 ‘세월호 기억공간’을 세워 주었다. 광화문 광장 구조 변경 공사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세월호 기억공간’을 해체 하되, 공사 후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촛불혁명의 한 중심지로서의 광화문의 의미화 계획의 한 일환으로 ‘세월호 기억공간’이 새로 다시 설치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벌어져 서울시장이 바뀌게 되었다. 오세훈 후보가 처음부터 당선이 유력했던 것은 아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과 청년 정책에서 실패를 해 온 위에, 적폐 중 하나인 LH비리가 터져 그에 대한 책임을 온통 뒤집어 쓰는 바람에, 야당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되게 된 것이다. 1년 짜리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부동산 특혜를 받았으면서, 그와 관련 수많은 거짓말로 시민단체로부터 고소되어, 1년 임기 마저 보장 되었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오세훈 시장이 최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오는 26일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한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기념수나 표지석 같은 것 외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수백만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여 이루어 온 위대한 역사적 역할과 업적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 진실 또는 진리와 정의가 우리 사회의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실과 정의를 밝혀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 책무임을 성찰하고 기억하게 하는 곳이다. 그것은, 오세훈 시장이 없애고 싶다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이러한 위대한 국가적 역사적 의미를 갖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끝내 사라지게 하려 했다는 과오를 범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오명을 온통 뒤집어 쓰는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세월호참사 때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비통한 심정으로 진상규명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고, 그 내용을 담은 촛불시민들의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출판 보급하며, 촛불혁명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활동해 온 <촛불혁명완성연대>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세월호 기억공간’ 폐지 방침이 철회 될 때까지 4.16가족연대 등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 7.15.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연대성명 - 대구4.16연대] 그 누구에게도 이 영혼의 영토를 철거할 권한은 없다

[성명] 그 누구에게도 이 영혼의 영토를 철거할 권한은 없다

- 오세훈 시장의 세월호 기억관 철거를 규탄하며

세월호 기억관은 국가폭력에 의해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수장된 사회적 대참사를 잊지 않으려는 기억의 영토다.

세월호 기억관은 한창 풋풋한 꿈을 안고 자라나야 할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참회의 영토다.

세월호 기억관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살인 범죄에 철저한 책임을 묻는 정의의 영토다.

그리고 세월호 기억관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는 참사의 진상을 밝혀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행동의 영토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 흐르도록 차마 셀 수도 없는 우리 국민들은 이 영토에서 울었다. 속죄하고 그리워했으며 다짐해왔다.

그리하여 이 영토는 별이 되어 떠나간 이들의 영혼의 거처다. 서울시민만의 광장도 아니며 가슴에 맺힌 슬픔을 넘어 다음세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국내외 시민동포들의 양심의 쫓대다. 따라서 세월호 기억관은 절대로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누가 이 영혼의 영토를 함부로 철거할 권한을 지닌단 말인가.

한낱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의 유한한 감투를 앞세워 이 피맺힌 영토를 지워버리겠다는 게 말이나 될 일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월호 기억관 철거 방침은 콘크리트 공사를 밀어붙여 기억마저 땅에 묻고 참회와 속죄의 기회를 박탈하며 안전사회로 나아가려는 무수한 땀을 짓밟는 행위다. 참혹하고 비정했던 그날을 잊지 않으려는 대구의 '세월호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행각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지난 7년 간 우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울고 어깨 걸면서 열과 성을 다해 연대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겪어 온 아픔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사회적 아픔이며 국민 모두가 오롯이 끼안고 치유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공감은커녕 마치 눈엣가시 빼듯 고집스럽게 철거를 강행하려는 오 시장의 행위는 인륜마저 저버리는 처사다.

그리하여 오세훈에게 명한다. 이 영토에 손도 대지 마라.

우리는 결코 이 진실의 영토를 빼앗길 수 없다. 안전한 내일로 가려는 양심의 쫓대를 내릴 수 없다.

2021년 7월 14일(수)

대구4.16연대

[연대성명 - 광주시민상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은 광화문 세월호기억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은 광화문 세월호기억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의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무능과 골든타임을 놓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장소이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시민들과 함께 지켜온 광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공간이며 진실을 향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공간이다.

이러한 추모와 약속의 공간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서울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과 정의를 지우려는 행태이며, 감추려는 자 덮으려는 자 지우려는 자이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은 추모와 기억의 공간을 넘어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해 후대에까지 울림이 되는 공간으로 남아야하며, 유가족 뿐만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야하는 공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서울시민과 세월호유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인 세월호의 기억지우기를 중단하고 세월호기억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또한 세월호 참사 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해온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은 서울시의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광화문 기억공간 철거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속히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기억공간으로서 영구존치를 위한 논의와 대안을 수립하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은 광화문 기억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연대는 물론 끝까지 투쟁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13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연대 성명 - 주권자전국회의]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세월호 기억관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세월호 기억관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다. 그나마 진전해 온 서울시의, 서울시와 관련된 민주주의를 그가 후퇴시키고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서울시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등에 7월 21일(수)부터 7월 25일(일) 사이에 세월호 기억관 내부의 사진, 물품 등을 철수하라고 하고, 7월 26일(월)에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서울시가 철거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한 단계별 공사 진행 계획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 등은 이전부터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계획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철거 통보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4.16세월호참사가족 등은 세월호 기억관은 시민의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사 기간 중 이전할 수 있으나 공사 완료 후 광화문 광장에 다시 존치되어야 함을 약속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사 후에 기억관이 광화문 광장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다. 그러면 기억관을 없애겠다는 것 아닌가?

무엇 때문인가? 세월호의 흔적을 없애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우겠다는 것인가?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세월호 기억관은, 4.16참사라는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더욱이 4.16참사는 아직 그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언제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 4.16참사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세월호의 기억은 보존되어야 한다.

함부로 기억관을 없앨 권한이 서울시에는 없다. 하물며 보궐선거를 통해 1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오세훈 시장에게는 더더욱 그럴 권한이 없다. 오세훈 시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망발인 것이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알뜰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세월호 기억관을 철거하겠다는 등
의 계획은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철거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세월호 참사를 기억
하리라 다짐해온 민주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21. 7. 14
주권자전국회의

[성명-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15)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세월호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7주기를 지났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어린 꽃송이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던 수많은 어른들의 눈물도 7년의 세월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삶이 무너져 내렸고, 폭식 조롱과 ‘시체팔이 한다’ 라는 막말과 ‘아직도 세월호냐’ 라는 소들을 온 몸으로 견뎌야 했다.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겠다는 약속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먹먹한 세월이 7년이나 흐른 것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아픈 이들만 더 아프고 힘들어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하나님께 부름 받은 목회자로서 우리는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의 존속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은 이 나라가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참회의 공간이며, 촛불 시민들이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추모의 공간이다. 또한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의 공간이다.

서울시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공간인 세월호 기억공간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기회를 가져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의 최근 행보를 보며 광화문 광장 공사를 빌미로 아픔의 역사를 가리려 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막말과 냉소로 세월호를 조롱하던 무리들처럼 마치 세월호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결코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서울시는 광화문 공사 이후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우리의 우려가 단

지 기우가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의 공간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꽃송이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있다는, 그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의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 아픈 이들과 우는 이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유일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국을 돌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기억공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라도,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 이 일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선한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월호 기억공간 보존을 위한 계획을 즉시 수립하라!

2021년 7월 13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연대성명 - 참여연대]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지우려는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지우려는 시도 중단하라

서울시가 오는 26일까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유가족·시민들의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와 관련한 논의 및 면담 요청은 거절한 채 아무런 대안 없이 철거만을 통보한 것이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공사 기간 중 임시 이전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공사가 종료된 이후 기억공간을 보존할 방안 없이 무조건 철거하라고 통보하며 유가족들과의 소통조차 거부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을 향한 일방적 폭력이다. 참여연대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이 갖는 상징과 의미를 지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은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벌인 힘겨운 투쟁의 역사를 상징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 ‘생명과 안전이 존중 받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한 데 모인 공간이다. 이같은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을 제대로 유지하고 안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책무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이러한 세월호 가족의 뜻과 시민들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세월호 기억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목도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약속한 우리 시민들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그 공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연대성명 - 민변]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1.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을 7. 26. 강제 철거할 것임을 고지했다. 기억공간을 광화문에 둘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 법률이 모든 일에 대해 그 정당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은 특별히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장하거나 보호하는 일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거나 명문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이 근대와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의 임의적 폭압을 견어내며 인류가 합의한 ‘법치주의’다. 즉 현대의 법치주의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규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철거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전근대적인 국가폭력에 가깝다.

2. 기억공간의 존재는 어떤 기본권의 보장을 의미하는가. 첫째,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의 ‘신원권’이다. 우리 대법원에서 인정한 신원권의 뜻은, 혈연으로 맺어져 운명적으로 고락과 영육을 함께하는 가족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것은 죽음을 당한 가족에 대한 내부관계에서는 의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될 하나의 권리’라고 한다. 신원권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 실현에 있어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기억공간은 희생자 가족들이 신원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효용과 의미를 가진다. 둘째,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이다. 광화문 광장은 접근성이 뛰어나고, 촛불집회의 상징인 장소다. 따라서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광화문에 설치된 기억공간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고경과와 향후과제를 전시한 게시물들을 보거나 직접 손글씨 작성 및 리본 제작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양심을 실천으로 옮기는 활동으로서 일반적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즉 서울시가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의미하는 장소인 기억공간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결국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과 다름없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헌법상 기본권 실현의 의무를 지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희

생자 가족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의 구체적 내용에는 공적인 기억과 추모도 포함된다. 따라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충분한 소통과 대안 마련 없이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간을 폐쇄하는 것은, 기본권 실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세월호참사는 현재진행중이다. 진상규명은 불완전하고 책임자처벌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희생자 유가족은 치유되지 않았다. 국민의 추모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월호 참사 추모와 진상규명 활동을 상징하는 핵심공간인 광화문 기억공간을 지우려 한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 속에서 지우려 한다.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재구조화 이후에 왜 기억공간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

4.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고하고 권고한다. 전 정권 또는 현 보수야당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 세월호참사이기에 기억공간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진정으로 해소하는 것이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없애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재 행태는 이미 지난 군부 독재시절 처참하게 실패한 방식이다.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보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그렇지 않고 폭력적 철거를 강행하는 경우 촛불시민의 강력한 직접행동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연대성명]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통보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통보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지난 8일 서울시와 416 가족협의회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논의 자리에서 “7월 26일까지 철거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가 결정되고 난 뒤 일곱 차례 이어져오던 자리에서 일방적 요구를 밝히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협의에서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의 의미를 되새기기보다 형식에 치우쳐왔다. 기억공간을 표지석이나 수목 등으로 대체하자고 한 것이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들의 공간이며 서울시는 이를 부정할 수 없다. 2014년 해상교통사고라고 보도되던 세월호 참사에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으로 뛰쳐나왔다. 2015년 국민의 목숨과 안전에는 관심 없이 비정규직을 해고로 내몰고, 밥쌀 수입으로 농민들을 다 죽이려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10만명이 민중총궐기로 광화문으로 향했다. 백남기 농민은 광화문으로 오는 길목 차벽에 막혀 물대포에 쓰러졌다. 박근혜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던 때, 국정농단 파일이 공개되며 촛불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세월호 가족들의 오세훈 시장 면담 요구에 서울시는 “전임 시장 때부터 마련된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는 말로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전임시장이라는 말에 숨어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다. 국민의 힘 당대표는 박근혜, 이재용 사면을 거론하며 촛불항쟁을 지우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광화문 광장 공사를 빌미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와 빈틈없이 일치한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공간이자, 진상규명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곳이다. 세월호 7주기를 지난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과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지는 못할 망정 세월호 지우기는 용납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지우려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대학생들은 416가족들과 끝까지 연대하고 실천해나갈 것이다.

2021. 7. 12

진보대학생넷

[연대성명] 전국대학민주동맹문화협의회는 서울시의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요구를 규탄한다.

전국대학민주동맹문화협의회는 서울시의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요구를 규탄한다.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7월21일(수) ~ 7월25일(일) 세월호 기억공간 내부의 사진, 물품 등에 대한 철수 요청과 7월26일(월)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추모와 기억, 약속의 공간을 철거하라고 나선 것이다.

2020년 7월에,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위해 단계별 공사 진행 계획으로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이전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전 할 수 있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존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서울시와 현재까지 7차례 면담과정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은 세월호 기억공간이 시민들의 것임을 전달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세월호참사 7주기 이후 세월호 기억공간 유지 방안에 대해서 추후 협의 하기로 하였으나, 서울시는 별도의 대안없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이후에는 세월호 기억공간이 존치할 수 없으며,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철거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임을 밝혀왔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이 세월호가족들 뿐만 아니라 시민의 것이며, 공사에 지장이 있으면 임시 이전하고 광장 조성 후 존치하면 될 터인데, 서울시는 시민들이 철거를 반대해도 진행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은 유가족과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낸 공간이다.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추모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갖기에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것이 옳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임시 이전할 수 있으며, 완공 후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취지에 맞게 위치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서울시장의 면담 또한 추진하지 않았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 지우기라 판단된다. 이것이 서울시가 세월호를 대하는 태도라면 큰 문제다.

서울시가 지금 할 일은 26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현재의 기억공간을 이동하고,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광화문 광장에 새롭게 모든 시민이 모이고 이용할 수 있는 기억공간의 영구화 사업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다. 서울시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서 국민상주를 지난 5년 간 해온 전국대학민주동문회의회는 서울시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방침을 규탄한다. 서울시의 폭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앞으로 생명과 안전한 세상을 위해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2021년 7월 12일
전국대학민주동문회의회

[연대성명 - 전국여성연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계획 오세훈시장을 규탄한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계획 오세훈시장을 규탄한다!

오세훈시장의 서울시가 2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요구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철거 통보는 세월호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기억공간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시민들의 희망을 짓밟은 행위이다.

세월호참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와 피해자들의 죽음을 전국민이 지켜보며 가슴아파했던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는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중한 생명들을 구하지 않고 방기한 정부와 책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광화문기억관의 철거는 엄연한 기억지우기이다.

시민들이 함께 투쟁하고 만들어낸 기억공간의 철거에 대한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다. 하물며, 보권선거로 당선된 1년짜리 서울시장에게 우리는 그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서울시와 오세훈시장에게 요구한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계획을 철회하고 영구존치를 위한 논의와 계획을 수립하라. 그것이 기억공간을 통해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드는 것이다.

전국여성연대는 이번 광화문기억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켜내기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1년 7월 12일

전국여성연대

[연대성명 - 전교조]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하려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하려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은 진실규명 약속이 담긴 시민들의 공간
- 서울시는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를 명목으로 7월 25일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수하지 않으면 26일 기억공간을 철거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4.16단체들은 서울시와 논의하며 세월호 기억공간을 시민의 것으로 존치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이후에는 기억공간을 존치할 수 없고 철거하겠다는 통보만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다. 전교조는 서울시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통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은 시민들의 공간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세월호 참사의 통탄을 함께 나누었고, 광화문 광장을 닫고 서서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광화문 광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간절한 바람과 약속이 어린 시민들의 공간이다. 지금도 추모와 다짐을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은 광화문 광장에 보존되어야 한다.

○ 서울시의 세월호 기억공간 일방적 철거 통보는 세월호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이다. 광화문 광장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서울시장이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세월호 기억공간을 광화문 광장에서 철거하겠다는 것은 세월호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이 넘도록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이 아니라 세월호 흔적 지우기에 서울시가 앞장선다니 이것이 될 말인가? 일방적 철거 통보로 세월호를 지우려 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분노하며 서울시를 규탄한다.

○ 서울시장이 지금 할 일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서울시장은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통보에 대해 사과하고,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 세월호 참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지 않는 장면을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본 중대 사건이었다. 우리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함께 이뤄낼 책임이 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세월호의 약속을

함께 한 전교조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우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 서울시는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라!

2021년 7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대성명-민주노총] 서울시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 ~ 민주노총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제 단체들과 함께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서울시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요구를 규탄하며 민주노총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켜내기 위해 제 단체들과 함께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서울시가 2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라고 한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추모와 기억, 약속의 공간을 철거하라고 나선 것이다. 이것이 서울시가 세월호를 대하는 태도라면 이는 큰 문제다.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은 유가족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온갖 어려움을 딛고 만들어낸 공간이다. 아픔의 공간이고 치유의 공간인 이곳은 어느새 이순신, 세종대왕 동상과 더불어 광화문을 상징하는 장소의 위상을 가진다. 또한 이곳에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많은 이들의 간절한 염원이 녹아져 있는 모두의 공간이다. 서울시가 함부로 철거 운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다.

서울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시민들의 마음이다. 광장의 민심이다. 현 오세훈 시장도 시민들의 그 마음을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듯 언젠가 그 시민들의 마음에 의해 인생과 경력의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금 할 일은 26일까지 기억공간을 철거하라는 행정 폭거가 아니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현재의 기억공간을 이동하고,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광화문 광장에 새롭게 모든 시민이 모이고 이용할 수 있는 영구화 사업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다.

잊고 싶지만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 아픔과 슬픔을 딛고 생명과 안전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일이 그러하다. 경우는 다르지만 9.11 국제무역센터 테러를 기억하고 극복하는 뉴욕시의 경우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 폐허의 자리에 희생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비를 세우고 공간을 넓혀 거대한 기억의 광장으로 재탄생한 그곳을 보라.

참사 이후 유가족들과 함께 상주의 입장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온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방침에 분노한다. 또한 행정력을 앞세워 밀고 들어오는 폭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돌아오지 못한 민주노총의 자녀들과 동료들을 위해 끝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켜낼 것이다. 그

리고 앞으로 우리가 열어야 할 생명과 안전한 세상을 위해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을 반드시 지켜
낼 것이다.

2021년 7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